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우리가 보는 세상 15년을 말한다: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발표 요약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팀

제1부: 민주주의

1.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강우창 고려대 교수)

이번 조사는 현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democracy in practice)’와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체제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는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in principle)’ 접근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신생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원인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수제, 대의제적 특징과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적 태도 선호가 제도와 가치관 간의 긴장관계를 빚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 조사 결과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역사적 정체성에 기반한 이념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인식 차이의 추이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2020년 사이에 긍정적 답변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진보, 보수 진영 간 미묘한 온도차가 작용하였다.

2015-2020년 사이에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가 증가하였다. 다만 변화 패턴에 있어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대폭 증가하였다. 역대정권 평가에 있어서는 보수정권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 집단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후퇴하였다.

개인의 이념성향과 역대정권에 대한 평가에 따른 민주주의 성숙도 인식에 있어 2005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 역사 인식에 따른 성숙도 인식 차이가 가장 크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로 증가하면서 인식 차이가 좁혀졌다.

금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들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특히 실질적인 민주주의(democracy in practice)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증가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선거결과와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들을 반영한다.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성이 높을 수록 지지도가 높은 반면,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다.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경우 선거결과와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증거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정체성이 원칙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념적 양극화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는 단일민족이라는 혈연적 의미가 강하였으나 지난 15년간 이러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조건들(대한민국 내 출생, 국적유지, 한국어 사용, 정치제도와 법 준수, 혈통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유지, 정치제도와 법 준수 등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혈연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중 정치적 요소들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집단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 사회적 배타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탈북자를 제외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 자녀, 조선족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부분이 한국사회의 향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타 집단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영토 인식과 관련, 남한을 한국의 영토로 국한하는 인식이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 이러한 인식이 높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 약화가 이러한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지난 15년 간 꾸준히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탈북자를 제외한 한국사회의 소수집단들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되었으며, 남한만을 한국의 영토로 국한하는 인식 증가, 대한민국 국적과 정치제도 준수 등 근대 유럽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이 강화된 점을 금번 조사 결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혈연적 민족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타적 형태의 민족주의가 증가하고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타성이 향후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역사인식과 정치정체성 (이내영 고려대 교수)

해방 정국, 분단과 건국, 한국전쟁, 유신체제, 민주화항쟁,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상이한 인식과 관점들이 존재해 왔으며, 역대 정권 평가에 있어서도 상반된 인식들이 충돌하는 등 민주화 이후 현대사 해석에 있어 이념화 정치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한국 현대사를 보는 시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의 역사로 인식하면서도 권위주의 체제 미화하는 한계가 있는 긍정사관과 분단국가를 고착화하고 불의와 왜곡이 있는 좌절의 역사로 인식하고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완성 과정에 주목하는 부정사관 두 가지가 있어 왔

다. 그간 이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족했으며, 이 두 가지 사관을 균형 있게 보는 역사관이 필요하다

한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 조사와 관련, 대체로 자랑스럽다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였으며, 대한민국 정체성 조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정체성과 소속감을 보인 바, 특히 연령이 높고 보수성향이 강할 수록 이러한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국가 자긍심에 있어서는 예술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보건의료 수준에서는 각각 높은 자긍심을 보인 반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군사력 수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부문에서는 낮은 자긍심을 보였다

해방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해방 후 3년 간 전개된 국가체제 형성과정에 있어 다양한 평가들과 인식들이 반영되는 시기이다. 특히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이념별, 연령별, 지지정당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되었으며 2005-2020년 연도별 평가 추이에 있어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바, 그 당시 집권 정당이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역사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전쟁 발발 책임론에 있어서도 이념성향, 지지정당, 연령대별로 다른 인식을 보이며, 2010년부터는 남한 정부나 미국 정부 책임론에 대한 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북한과 소련, 중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이념성향, 지지정당 별로 상이한 평가를 드러내며,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에 있어 진보·보수 간 상반된 평가가 대립하였다. 또한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설문 조사 당시 정치적 분위기 및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정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은 약한 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역사적 논쟁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상당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나, 한국 국민들은 긍정·부정사관에서 비롯된 정치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균형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4. 한국인의 미디어정체성: 1인 미디어 시대의 언론 지형 (한규섭 서울대 교수)

미국 및 한국사회 모두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 추이가 생활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사회 정체성화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미디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 정체성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매체에 대하여 팩트(fact)나 논조가 아니라 정체성과 진영논리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기성언론 주도 시대와 비교하여 1인 매체 시대가 도래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번 설문 조사에서는 방송, 신문, 유튜브(YouTube) 채널 등을 포함하여 총 34개 언론매체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특정 매체들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진보·보수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자들 간 추이 비교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있어 방송 매체들의 이름은 민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동 조사 결과 진보보수 정당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언론 매체들은 9개에 그친 바, 이는 대다수 언론에 대한 평가가 매우 상이하며, 정치권 양극화보다 미디어 매체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총 34개 매체 중 양극단에 각각 유튜브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 바, 이는 매체의 속성 상 양극단에 속한 유권자들에 많이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 반영한다. 특히 총 15개 유튜브 중 12개 유튜브 매체들이 평균적인 보수정당 지지자들보다 더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튜브가 대안적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 이념, 연령, 성별에 따라 미디어 정체성이 상이하고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바, 특히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좌측에 위치하고 반대 측에는 유튜브 채널들이 존재하는 지형이 이념 스펙트럼에 따른 미디어별 신뢰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진보매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은 편이며, 매체별로 보면 뉴스전문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이어 지상파, 신문, 종편, 유튜브 순으로 신뢰도가 낮아졌다.

미디어별 신뢰도와 정책 선호도 간 상호관계에 있어, 지지정당, 지역, 이념별로는 정책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미디어 매체별로는 정책 선호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가 미디어 매체에 대한 신뢰 자체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 선호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선호가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한국사회 내 미디어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소위 사회정체성화 되어가고 있다.

5. 토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前의원), 김세연 (미래통합당 前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금태섭 전 의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 국민들이 살아온 시대와 관념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고 과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습되었으나 지금은 그와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일례로 들고 있다. 한국이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민주주의를 이룬 것에 대하여는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 지난 수십년 사이에 걸쳐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측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김세연 전 의원: 발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 체제 등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in principle)의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이는 등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democracy in practice)의 측면에서는 평가르기, 당파성 등의 요소들이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현상이 역설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원칙과 실제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신현영 의원: 발제 연구 결과에서 최근 2015-2020년 간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급격하게 높아졌으며 특히 진보층에서 긍정적 인식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촛불혁명과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발이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근 인식이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선진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바,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가 간 치명률에 있어서 한국은 2.16%에 그치지만 미국 4.4%, 영국 15.5%, 프랑스 17.8%에 달하는 등 민주주의 체도를 갖춘 선진국이라고 여겨왔던 나라들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더불어 한국의 선진적인 대응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공고화에 작용하였다고 평가한다.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금태섭 전 의원: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족주의는 강화되었지만 배타성 역시 강화되었다는 발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배타성 강화에 대하여 특히 우려를 표명한다. 일례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차별금지법 논의를 소개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배타성이 가장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이주민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민족이라는 혈연적 인식이 도전 받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이주자에 대한 배타성 역시 강화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농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난민보호와 이주민 수용 주장, 보수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외국인 적용 반대 등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이주민 이슈를 자기 정치 진영을 강화하는 진영논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앞으로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세연 전 의원: 발제 중 탈북자, 조선족,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특히 이주민 출신 한국인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배타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에서 국가공동체로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지체현상의 일종으로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통합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영토 인식과 관련하여, 한반도+만주지역까지 한국의 영토로 보는 인식이 점차 저하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추후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영토 조항과 관련 국회 내에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신현영 의원: 영토 인식 부분에 있어 젊은 세대에서 한국 영토를 남한으로 국한하여 보는 경향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젊은 세대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사업 참여 경험을 언급하면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건의료협력이 먼저 시작된 사례와 같이 남북통일교류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2016년 연세대 간호학과에서 진행한 한국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의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대체로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의 통일 이슈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일부 관심을 보이는 층은 통일 보건의료에 긍정적이며 관련 활동을 할 의지가 강한 것을 보여준다. 결국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무상 치료 문제가 이슈화되고 조선족과 중국인 거주지역에 대한 보수적·비판적 인식이 강화되는 등 한국 사회의 배타성이 강해지고 있고, 싱가포르 내 외국인노

동자 거주지에서 코로나가 대폭 확산한 사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주노동자, 탈북자, 조선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탈북자가 3만명이 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북자들을 한국사회에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역사인식과 정치정체성

금태섭 전 의원: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이 정치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며 반대로 정치정체성이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바, 진보·보수 정권 집권 시 역사교육에 개입하려는 부정적 경향이 보인다. 과거 유신 정권 하 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를 거의 배우지 못했고 특히 해방 후 좌익활동에 대하여 전혀 접하지 못했던 자기 세대를 사례로 역사 인식에 있어 어떻게 최소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다.

김세연 전 의원: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포함시켜 젊은 세대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과 더불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 기성세대의 독점 행태가 정치, 언론을 넘어서 역사인식에 있어서도 교과서 개정 시도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에 협상론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권 내 역사인식 차이와 관련, 보수당에서 진보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평가, 진보당에서 보수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역사 인식에 있어 훨씬 더 통합적인 인식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지도자 평가 항목에서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2005년, 2020년 각각 긍정적 평가가 10%로 소폭 증가한 부분과, 한국전쟁 발발 책임론에 있어 남한 정부 및 미국 정부 책임론이 낮아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평가에 있어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집권 당시에는 낮았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며 역대 대통령 평가를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현영 의원: 영역별 국가자긍심 추이에 있어서 보건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는 높은 추이를 보이지만 반대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군사력 부문에서는 국가자긍심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부분이다.

또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국가자긍심, 역사인식, 국가정체성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영역별 세대별로 인식 조사 결과가 상이할 것으로 보고 향후 추가적인 세부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의 미디어정체성: 1인 미디어 시대의 언론 지형

금태섭 전 의원: 실제 정책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매체만 접하고 신뢰하는 현상 (filter bubble)을 배경으로, 유튜브 등 개인매체들이 수용자가 선호하는 이슈 중심으로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정당 슬로건의 수용자, 지지자만 타겟으로 하여 관련 이슈들만 끌어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매체가 분화될수록 매체별 수용자들도 분화되고 사회 인식이나 생각도 달라지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김세연 전 의원: 지상파가 유튜브 채널들보다 당파성이 크다고 하는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저하 현상에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디어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 역시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들면서 한국 역시 기성언론 대신 유튜브 채널들로 돌파하려는 대안 모색 실험들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체 문식력(media literacy)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적 차원에서도 미디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 발제 조사 결과가 현재 미디어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양한 미디어매체에 출연하여 코로나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말이라도 미디어의 성향과 방송제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왜곡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양질의 보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출연자가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SNS 등에서도 어떻게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6. 발제자 발언

한국인의 미디어정체성: 1인 미디어 시대의 언론 지형

한규섭 교수: 한국의 언론환경이 외국과 비교해서 양극단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한 바, 그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손쉽게 1인 미디어를 활성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발달된 인터넷 환경을 언급한다. 특히 한국 지상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권이 변화할 때마다 같이 변화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점을 외국과는 매우 다른 현상으로 평가한다.

역사인식과 정치정체성

이내영 교수: 과거 반공으로 이념 보수화가 진행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양한 의견과 이념들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한국이 열린 민주화 시대에서 과도하게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한 진영 내에서도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감성적 접근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정치적 행태가 문제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의견, 이념, 인식들이 공존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이념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강원택 교수: 논의된 바와 같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바, 특히 농촌, 건설

등 산업 분야에서 주요 인력이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대북 인식과 관련 규범적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정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효용성을 설득하고 내부적인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강우창 교수: 코로나19 발발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신뢰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금번 조사 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한계로서 작용한다. 지지정당의 승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변화하는 현상이 외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in principle)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느냐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한국사회에서 과제로 남아있다.

제2부: 대북, 대외 관계 및 정부 조직

1. 국정가치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상과 관련하여 높은 경제성장률,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적 경제, 그 다음으로는 경제대국, 그리고 안전한 사회로서, 20~60대는 안정적 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10대는 안전한 사회를 선택하며 세대가 올라갈수록 경제 성장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높은 삶의 질이나 환경에 신경 쓰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전 → 환경 → 삶의 질).

더불어 국민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원하지만, 공공서비스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기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 발전소가 필요할 것이다 혹은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의 약 60%가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이 중 40~60대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사회 인식과 관련 진보 층이 복지를 원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되게 진보층의 65% 또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경제성장보다 복지를 중요시하는 응답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7%대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보다는 다른 과제를 국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20년 기관 신뢰도 중 국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다. 시민단체, 언론기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다. 진보 보수 이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토론: 주지에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교수

개인 자유와 사회질서 중 사회질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과들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규제완화와 혁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의 사회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상적인 인식과 현실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인식의 차이인 것으로 진단한다. 매슬로우 5단계처럼 결핍 욕구에 머무르는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 10대들이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을 국회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에 장기적 국가목표 순위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

대외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의 탈세계화를 진단한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 중 경제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들이 세계화 시대에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화를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는 무역국가 국민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반면 국산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2015년 조사에 비해 2020년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그렇다는 답보다 8.3%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의견은 2015년과 2020년 조사 모두에서 부정비율(2020년 조사 66.4%)이 긍정비율(33.6%)의 두배가 된다. 이러한 결과에는 강한 한국 민족 정체성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입장과 국제기구의 결정이 다르더라도 한국정부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20년 조사 모두에서 긍정비율이 거의 6할에 이른다 (각 년도의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각각 18.2%와 17.1% 높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2015년 65.1%가 2020년 58.9%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결정 수용성을 유지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평가한다.

세계화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도 크게 느껴지고 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문항은 2020년 조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무려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69.5%가 그렇다고 답해 확대중인 빈부격차에 세계화도 한 몫하고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 경제에 더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2015년 조사에서는 63.8%가, 2020년 조사에서는 69.5%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요인을 보면,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이 아님’ 3개 선택지에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위협이라고 답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향후 10년내 국익에 ‘매우 위협’으로 답한 비율 순으로 보자면, 전염병의 창궐(66.2%)—북한 핵무기 보유(55.5%)—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55.2%) 가 3대 위협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제 테러주의(46.4%)—중국의 강대국 부상/에너지 수급차질/원전 재난/AI 실업위기가 40%대를 조금 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의 창궐을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더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하게 된 것이 눈에 띈다.

주변국가별 호오도에 있어서는 미국만이 2015년과 2020년 조사 모두에서 ‘우호적’이라는 답이 77.3%와 6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국은 2015년 조사에서는 50%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20.4%만이 우호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2015-2016년 싸드(THAAD)도입을 둘러싼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경제보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적대적’으로 보는 감정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65.7%)보다 높은 71.9%

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이는 2019년도 여름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반일감정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 꼴로 ‘균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강화’보다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9.6%와 13.9%로 높았다.

토론: 정성철 명지대 교수

연구조사가 5월에 실시돼서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국가들이 자국 중심으로 변할 것이고 국제 질서(international order)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들이 국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한다.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고 한미동맹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볼 수 있다.

한국이 국제주의에서 후퇴하는 모습은 아직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한국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보이지만 국제기구, 동맹에 대한 의견을 보면 환경, 전염병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판 국제주의라고 생각한다.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주변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다. 동남아/서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이외에 삼각관계 소다자주의로 한중일 관계, 한미중 혹은 한미일 전통적인 관계들을 잘 활용 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한중일 관계에서는 중일 사이에 한국의 역할이 클 것을 전망한다.

3.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황태희 연세대 교수)

남북 분단 상태 인식과 관련하여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인식이 높으면서도 북한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 또한 높게 지속되고 있다. 남한만이 합법적 정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을 형제로 보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남으로 본다는 인식과 무관심하다는 인식은 증가하였다. 특히 적으로 인식하는 답변이 200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다. 세대 간 뚜렷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 20대에서 북한을 남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특히 높으며 40대는 우리나라 형제로 보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40-50대가 북한을 가장 우호적으로 인식하며 60대는 20-30과 비슷하다.

북핵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북핵은 매우 위협이라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인식과 대비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소 낮게 나온다. 경제 지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왔으며 경제 제재에 관한 선호가 대립되는 현상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으므로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는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해석한다.

통일에 관한 인식에 대해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필요하지도 않다는 인식이 높다.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한민족이라는 이유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한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 두 국가 해결안 (two-state solution) 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비용에 관해서는 1년에 20만 원 미만 지불 의향이 특히 많았다.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 중 통일방식이 남한식이건 공존형이건 상관없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으며 무관심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20-30대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지금의 20대에서 북한에 대해 남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세대별로 그 이유가 굉장히 다르고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한국 사회의 주된 세대로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시선의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토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5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대체로 5년간의 차이가 앞으로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독립 국가라고 보는 인식과 대비하여 남한 정부가 합법적이라는 생각을 연결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충돌되는 부분이 증가되었다. 북한에 20대의 의견을 북한에 대한 적대심 아니면 무관심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한다.

재발표: 황태희 연세대 교수

현재 20대 중 북한에 대해서 남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대는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다르다. 20, 30대가 젊은 세대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의 주된 세대로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제3부: 다원화 사회와 통합 가치

1.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시민사회 지형 변화: 2005-2020 (김석호 서울대 교수)

개별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사회의 지형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Civil Society Center에서 내린 정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가와 시장, 그리고 1차적인 가족관계와 독립적인 모든 연결들과 조직들을 “시민사회”라고 정의 내린다.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어 있고, 이익이든, 가치든, 규범이든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의 결과물, 이를테면 동호회, 계, 노동조합 등을 통틀어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가 모호해지고, 시민사회가 시민단체의 사회가 되었고,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정치 단체,

노조 등 흔히 시민사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모임이나 활동이 연고집단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비난만 할게 아니라, 기존 시민단체의 사회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보는 동시에 연결망과 조직에 대한 역사적 추이를 관찰해봐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 LCA (Latent Class Analysis)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했는데, 이는 경우의 수를 구분했을 때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해서 분집을 시키는 연구 방법으로, 응답 패턴 이면에 있는 규칙성을 잡아보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LC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이 A라는 집단에 가입해 있으면 B와 C에는 가입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네트워크 지도로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단순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시절에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떨어졌다. 이 중에서도 가입률이 높은 것을 살펴보면 “동창회,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취미/문화/학술모임,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종교모임”이 있고, 이중 종교모임이 적극적 참여율까지 높다. 시대별 특성으로는 2015년에 종친회의 중요성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2020년 인터넷 동호회의 가입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LCA를 보면 최소참여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진 사람들이 파편화, 개인화되어간다는 모습을 반영한다. 연고집단 참여자는 33%선을 유지했는데, 사람들이 단체 가입을 매개로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참여자는 전체의 15% 선에서 유지된 것으로 평가한다. LCA를 바탕으로 만든 참여 연결망을 보면, 2005년에는 한국인들의 네트워크의 핵심은 사적이고 공적인 관계가 섞여있는 동창회이고, 종교모임도 독립적인 위치가 있다. 2015년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중앙에 모여있던 모임들이 밖으로 퍼져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집단들의 예시로 정치단체, 이익단체, 시민단체가 있다.

토론: 하상응 서강대 교수

비록 시민사회/자발적 결사체가 가족, 국가, 시장과 모두 다르다고는 하지만 많은 결사체들이 이 셋과 구분되기 어렵다. 종친회, 향후회는 가족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직능단체는 시장, 정당/정치단체도 국가와 지나치게 가깝다.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측정의 문제가 있다. 자발적 결사체 참여 문항 중 비슷한 것을 찾자면 1980년대에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는 딜레마가 시대적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같은 문항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년 전의 개념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2005년 기준으로 지난 15년동안 변한 점들을 평가한다. 종친회, 향우회,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줄었고 인터넷 동호회 참여하는 사람은 늘었으며, 동창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한국인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

직장 내에서 삶의 질, 일반적,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과 행복 유연근무제 및 제도로 나눠서 살펴 보았다. 전반적인 설문 구성으로는 1~7은 삶에 대한 부분, 8~10은 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있고, 전반적인 동향으로 한국인들은 물질적 사회조건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낮고, 특히 북유럽 국가와 비교를 하면 더 더욱 그렇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직장 생활의 질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고 민주당을 지지, 월 500이상을 버는 20대 화이트칼라 전문직이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삶의 질에 있어 여성친화형 가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인천, 경기의 직장생활 질이 높은 점, 그리고 대구, 경북이 낮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념은 직장 내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지정당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전체적인 삶의 질을 보면,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직업, 소득의 측면에서는 앞에 직장 생활에서 나타난 동향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 성향의 경우, 여기에서는 정당이 오히려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치성향이 진보일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유연근무제 인식도 측정 및 진단을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유형에 근거한 동 설문지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 중 “파트타임 근무제, 근무시간 선택제”는 난이도가 쉬우며, “집약 근무제”는 난이도가 보통이며, “스마트 워크제, 재택 근무제”가 난이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15년 후에 이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시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문항이 될 것이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필요성 인식 비율을 보면 젊은 층(20대)에서, 학생들에게서,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에 직업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반적인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연근무제 필요성과 직장 생활의 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연근무제를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모집단이 조사기간이 5월, 유연근무제 도입 시기 초반이라 부족했음을 언급하였고, 하지만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직장 내에 삶의 질이 높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번 조사를 통해 직장의 질, 일반 삶의 질, 유연근무제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행복 관리, 다양성 관리, 삶의 관리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토론: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와 관련된 현 상황과 청사진에 대해 설명한다. 1997년도에 제도적 기반화, 저출산과 고령화가 큰 문제였으며, 2000년대 이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처음 등장했다. 2017년에는 116,000명이 66.4%의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였으며 2018년 고용노동부의 일, 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한 번이라도 도입한 사업체는 25.6%로 약 1/4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근무가 트렌드이고,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재택근무에 따른 정부 지원도 늘어나 주 1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이런 트렌드를 가속화시킬 것 같다고 전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운영방식은 탄력적 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3.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로 본 사회갈등 인식의 변화 (이념/세대/계층)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

한국 사회갈등 인식의 구조 변동에 대해서 발표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권자 사이 거리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설문조사를 만들었는데, 12-15개의 문항을 통해서 집단 간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빈부, 성별, 출신 지역, 정치 이념의 영역에서 거리가 거리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고, 집단 간 혐오 갈등과 이익 갈등/정체성 갈등 사이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전반적인 동향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이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념 갈등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계급 갈등 (노동자와 기업 간 갈등)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이념적 양극화와 관련,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정당 간 거리감이 멀어지는 것으로 느꼈다. 2006년에 양 당은 중도(보수와 진보 사이)에 가까웠으나 더더욱 극단적으로 되었다는 입장이다. 당들의 정치적 이념과는 반대로 한국사회 대다수 국민들은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위기를 구속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관련,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신뢰도는 임기 초반에는 높지만, 정부는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적 기관 신뢰도도 높아지고 대기업 신뢰도도 높아졌다고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국가 자부심과 애국심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런 높은 국가 자부심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국가 자부심이 클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호트(cohort)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는 386 세대가 과거 50대와 다르게 옛날부터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성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진보 우위 정치구도에서 균열 조짐이 보였는데, 4월 진보진영, 하락하는 국정 신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신뢰와 국가 자부심의 상승이 단기적으로만 지속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변동 요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미흡한 경제 대응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는데, 설문 조사 결과 국가 경제가 1년 전에 대비해서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며, 체감 상 느끼는 경제 수준도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국가 경제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보이는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로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2008-2009년 경제 위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 배진석 경상대 교수

한국 국민이 예전보다 진보적이며 정 박사의 그래프에서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집단과 개인의 가치,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반영된 진보와 보수의 인식을 인지하고 있

지 않다. 복지보다는 성장 문제, 성장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복지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2017, 18년 진행했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념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는 북한에 대한 개념, 반공 이념에 대한 개념 혹은 계급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한울 박사는 몇 년 전부터 상층적 유권자들을 얘기하며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한울 박사의 연구결과와 본인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젊은 세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보나 보수냐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지 않는다. 성장, 복지, 안정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진보 보수의 기준을 제시했고 여전히 50대 60대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크게 작용했는데 이번 정한울 박사의 연구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심층 분석에서 논의 된다면 한국의 유권자에 대한 진보와 보수를 정의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한국의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조민효 성균관대 교수)

2019년 12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가 외국인인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다문화 열풍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을 넘은 2007년을 전후로 불어왔는데, 이 당시 관 주도로 여러 지원 정책과 법률이 제도화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문화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주로 결혼 이주여성들한테 초점을 맞췄고,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관 주의의 다문화 사회 주도로 인해, 다문화주의를 곧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상정하고, 다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논쟁에 대한 시민사회 내에서 담론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열풍을 겪은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는 여러 조선족 한인여성 토막살인 사건이나 제주도 난민사건, 그리고 세계적인 자국우선주의 동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다면성”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국가경쟁력과 문화 다양성을 강화해준다는 이상적 장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15년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다문화사회 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장된 우려는 20년에는 잦아들었고, 그 대신 외국인 유입을 일자리 위협으로 인식하는 등 실질적,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다음 두 가지로 추측해보았다. 미디어에서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소외계층이 출연했다면, 이제는 각종 예능/교양 프로그램에서 좀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외국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향상된 국가 자부심에 대해서 역설하였고, 이런 향상된 국가 자부심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했다는 것에 일조했다.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소속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조사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답변에서 20대가 특히 꾸준히 낮은 소속감을 보여줬는데, 실업,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활동이 왕성한 40-60대는 이보다 훨씬 더 소속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높은 소속감과 반대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다문화국가보다 단일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

인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와 관련, 소속감 증가는 사회의 주류로서 “나”의 행동반경이 넓어진 것에 따른 것의 결과라면, 보수적인 태도는 자신이 주류로 속한 사회에 타인의 진입에 경계심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올바름, 도덕, 인권 등의 논의에서 나아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 방안이 필요하고, 융합의 방향,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요구된다.

토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 2007년도에는 방문취업 H-2 비자가 만들어지면서 동포가 우리나라 전체의 41%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도 종사할 수 있는데, 장기적 취업도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에게는 위협의 요소가 되었다. E-9이라는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이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9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내국인들이 설 자리가 적어지는 걸 체감하게 되며 내국인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단순히 이민자들을 불쌍하다고, 인권적인 문제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이민자를 경쟁상대로 여기면서 수용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전체의 12%가 늘어나는데 (2000년대 초반 해도 4%)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내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마련할 때나 자녀 대학을 보낼 때 외국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며, 어떤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착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0 년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팀 (가나다순)

-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예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선거, 정치행동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 공저), "The Liberal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Opportunity Costs of Voting and Electoral Outcomes in South Korea" (2019), "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r Realignment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2019, 공저) 등이 있다.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2019), "사회과학 글쓰기" (2019), "한국 정치론" (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 (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 년의 평가" (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2016) 등이 있다.
-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미국 시카고 대학교 (University of Chicago) 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저로는 "The Quality of Civil Socie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ISSP Countries" (2016), "What Made Civic Dimension of National Identity More Important among Koreans?" (2015),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이유로 투표하는가?" (2015), "통계를 통해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등이 있다.

-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조지아 대학교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네바다 주립대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조교수, 남가주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G 연암 학술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인사혁신처 혁신정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 인재관리 및 조직관리, 인적자원개발, 플랫폼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Do Trust and Culture Matter for Public Service Motivation Development? Evidence from Public Sector Employees in Korea" (2019, 공저), "공직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주의적 분석연구: 공공봉사동기의 통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2019, 공저), "대한민국 공무원의 동기유형과 조직시민행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18, 공저) 등이 있다.
-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국정평가 연구소 소장.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한국행정학회 국제협력위원장,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 센터장, 세계행정학회(IIAS) 연구위원, 미국행정학회(ASPA) 국제화분과 연구위원장, 아시아행정학회(AGPA)사무총장 등과 국회입법지원단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단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협력적거버넌스, 정부규제, 정책변동,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설계, 정책네트워크, 정부혁신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The Dynamics of an Interorganiz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Risk Hypotheses" (2019), "Do Political Similarities Facilitate Interlocal Collaboration?" (2018) 등과 편저에는《함께 풀어나가는 사회문제:갈등과 협력사례》(공편),《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장,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장, EAI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선거정치, 의회정치 등이다. 최근 논저로는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2019), "Politics of party polarization in East Asia: A comparison of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2018, 공저),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2018) 등이 있다.
- **이숙중**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 및 리서치 디자이너.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행태, 선거정치, 대외안보인식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세대투표 연구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21대 총선〉(2020), 〈한국인의 신안보인식: 변화와 지속성〉(2019),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의 부상〉(2017) 등이 있다.

- **조민호**_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책평가, 복지정책, 교육 및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강사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2020, 공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2020, 공저),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2019, 공저),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Durunuri Programme on Low-wage Workers' Social Insurance Coverage in South Korea" (2019, 공저), "행복(공공)기숙사 도입이 대학가의 임대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활용하여" (2018, 공저), "Exploring the Acculturation Profiles and Adaptation of Children of Multiethnic Families in South Korea" (2016) 등이 있다.

- **한규섭**_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인문사회부 부부장, 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이다. 최근 편저에는 "Economic and Cultural Drivers of Support for Immigra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19),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 트렌드" (2016, 공저), "The Influence of "Social Viewing" on Televised Debate Viewers' Political Judgment" 〈Political Communication〉 등이 있다.

- **황태희**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Texas A&M 대학교 조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제재 및 원조, 청중비용, 인권, 북한의 정치 경제 등이다. 관련 논저에는 "Economic Sanctions and Government Spending Adjustments: The Case of Disaster Preparedness" (BJPS 2019, 공저), "Do sanctions spell disaster?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EJIR 2019, 공저), "Talking to Whom? Changing Audiences of North Korean Nuclear Tests: Supervised Machine-Learning Analysis of the KCNA" (SSQ 2017, 공저), "Detecting audience costs in international disputes" (IO 2015, 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김세영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sykim@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7월 13일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